



[라이프]  
집에서 간편하게  
HMR 안주 대전  
니



Life

[라이프]  
롯데백 아모레스토어  
대면 없이 뷰티체험  
L2



# 유흥시설 “강제휴업에 굶어죽는다”... 집합금지 민원 폭주

서울시 유흥시설 서류·전화 민원  
소상공인 대출·보상금 없어 막막

서울시, 지원금 등 대책마련 건의  
환자 증가세 안정까지 상황 유지 될 것

서울시가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시설에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해달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유흥업소 집합금지 행정명령 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은 지난달 30일 기준 서류로만 총 153건 접수됐다. 전화를 통한 민원은 하루 평균 100건 넘게 들어오고 있다.

시는 올해 4월 8~19일 강남 룬살롱 ‘크&트렌드’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것을 계기로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초 감염병 확산세가 누그러들던 시기에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발병이 터졌고 시는 5월 9



지난 4월 8일 오전 박원순 시장이 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소재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룬살롱 등 2146개 유흥시설에 대해 무기한 영업 중지를 선고했다. 반강제적 폐업 사태가 두달 가까이 이어지자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서울시에 생계 곤란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역삼동에서 1종 유흥업소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4월 서울시의 (행정명령)

조치로 한달 중 3분의 1 이상의 영업일수 동안 가게 문을 열지 못하게 됐다”며 “가게 월세만 해도 천만원 중반인데 서울시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파산하게 생겼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유흥업소는 소상공인 대출도 지원되지 않는다”며 “휴업 보상이라든지 영업을 금지함으로 인해 발생할 파산·도산을 막을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간청했다. 마포구에서 룸이 2개 있는 노래방을 운영해온 자영업자 B씨는 “11년 전 유흥주점으로 신고했던 곳을 인수받아 장사한다는 이유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지만 기꺼이 감수하려 했다”면서 “하지만 서울시에서 이번에 시행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너무 힘들어졌다. 지난 1차 영업정지 때도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태원 사건 이후 또 운영을 중단하라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냐”며 울분을 토해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흥업소에 대한 장기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큰 손실이 발생한 영업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유흥시설 휴업 지원금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후 마땅한 직장 없이 유흥업소를 전전해온 C씨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지난번에 이어 또 내려졌다”며 “저번에는 벌여둔 돈이

조금 있어서 한달을 버텼는데 이번에는 진짜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강제조치가 내려질 때마다 유흥업소 직원들은 돈을 벌지 못하게 된다”며 “코로나 때문에 병 걸려 죽으나 강제조치로 굶어 죽나 똑같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유흥시설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과 생활고를 호소하며 부분적인 영업 재개나 재난지원금 등을 요청하고 있지만 반대 입장의 시민들로부터는 유흥시설의 영구적인 추방을 요구하는 민원 또한 쇄도하고 있다”며 “신규환자의 증가세가 안정될 때까지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된) 현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 경주시와 충북 음성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 권고에 동참한 관내 유흥시설에 현금 5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박원순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만들 것”

‘CAC 서밋’서 기후·환경분야 발표  
“한뼘의 도시공원도 지정해제 막을 것”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원 부지로 지정된 뒤 오랫동안 실제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땅의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3일 서울시가 주최한 온라인 국제회의 ‘CAC 글로벌 서밋 2020’ 기후·환경분야 발표에서 “숲과 정원을 보전하기 위해 한뼘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도 해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안전한 ‘그린 쉼터’로서 공원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도시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강남과 강북권 각 1곳에는 ‘바람길숲’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두고 2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지정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

다. 이 제도는 2000년 도입돼 오는 7월 1일부터 첫 적용 사례가 나올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면적은 117.2㎢에 달한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그린뉴딜을 통해 서울을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로 지구가 오히려 활력을 되찾는 역설은 전 인류가 가야 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탈(脫)탄소’ 시대로 가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건물의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확대와 대규모 ‘그린 리모델링’, 공공기관 차종 전기차·수소차 의무화와 충전 인프라 확대, 자원회수 시설 확충, 2022년까지 시민속의예산 1조원 확보,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등을 그린뉴딜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날 ‘도덕경제학’ 저자인 미국 경제학자 새뮤얼 보울스 박사, 이화여대 자

연과학부 최재천 석좌교수 등 석학들도 코로나19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보울스 박사는 지금까지 시장(市場)과 정부라는 양 극단 사이에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됐다면 앞으로는 시민사회가 새로운 꼭지점으로 부상해 ‘시장-정부-시민사회’의 삼각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울스 박사는 “윤리, 도리, 연대감 등이 코로나19 대응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시장의 신호나 정부의 명령이 아무리 잘 전달됐더라도 시민이 도덕적이지 못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재천 교수는 “이번 세기, 100년 안에 인류가 멸종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려면 극단적인 뭔가가 필요하다. ‘친환경’, ‘환경주의’ 등의 용어를 많이 들었는데, 이를 넘어서는 환경중심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코로나19 대응 비상식량 지원 3일 오후 서울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에서 직원들이 서울시내 재난취약계층 899가구에 전달할 ‘코로나19 대응 재난취약계층 비상식량세트’ 포장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 서울시, 제조업체에 3000만원 긴급 수혈

긴급자금 지원 5일부터 온라인 접수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제조업체를 위한 긴급자금 지원 신청을 5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본 서울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체에 사업체별 최대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선정된 기업은 3개월간 종사자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시는 이번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총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약 1500개 업체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원 신청은 ‘서울제조업긴급사업비’ 홈페이지나 서울시 공식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시는 접수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업종별로 신청 일정을 나눴다. 의류봉제·수제하는 5~19일, 인쇄는



소규모 제조업 긴급자금 지원 홍보 포스터. (서울시)

10~24일, 기계금속은 15~29일이다. 시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도시제조업 긴급자금 접수지원센터’를 업종별로 1곳씩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해당 업종 신청 기간(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 서울 전동킥보드 사고 급증... 지난해 117건

1년새 2배 늘어... 충전 중 화재 발생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격히 늘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서울의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7년 73건, 2018년 57건이었다가 2019년에는 117건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같은 시기 자전거 사고는 각 8301건,

7348건, 8042건이었고 이륜차 사고는 1만 3868건, 1만 3798건, 1만 3791건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3년간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 247건



중 차량과 충돌한 사고가 63건으로 25.5%를 차지했다. 한편 전동킥보드 화재는 2017년 9건, 2018년 10건, 2019년 2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4월 말까지 12건 일어났다. 2017~2019년의 42건 중 95%인 40건은 충전 중 발생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화재는 충전지에서 폭발적인 연소 현상이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다”며 “실외의 개방된 공간에서 충전해야 화재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